

고령화 사회 대책 시급



이광호(KBS 해설위원)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모두 370여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2천년 고령화 사회(노인 인구 비율 7%)에 들어선지 2년여만에 노인 인구가 1%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선진국의 평균 고령인구 비율 14.4%보다 아직은 낮은 수치지만 오는 2019년에는 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 14%)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농촌은 곳곳에서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노인 인구 비율 20%)로 접어들어 심각한 인구 불균형과 노인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2천년 경남 의령군과 남해군 두 곳뿐이던 초고령 지역이 불과 2년만에 23곳으로 늘어났다. 고령사회 지역도 무려 73곳으로 전국 89개 군 대부분이 올해 말이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속도가 눈부시게 빨랐던 것처럼 인구구성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를 거쳐 고령사회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2050년 노인인구, 어린이 수보다 많아져

해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초래되는 노인문

제는 이미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21세기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집계를 보면 전세계의 노인 인구는 현재 6억 5백만명이지만 오는 2025년이면 현재의 배로 늘어나고 2050년엔 무려 20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인층 인구가 14살 이하 어린이의 수를 넘어서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몇 년전부터 관련 정부기구를 신설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국 보건부는 노령화 대책국을 설치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노동자의 조기 퇴직이 연금제정의 파탄을 불러와 경제에 부담을 준다면 퇴직 연령을 늦추는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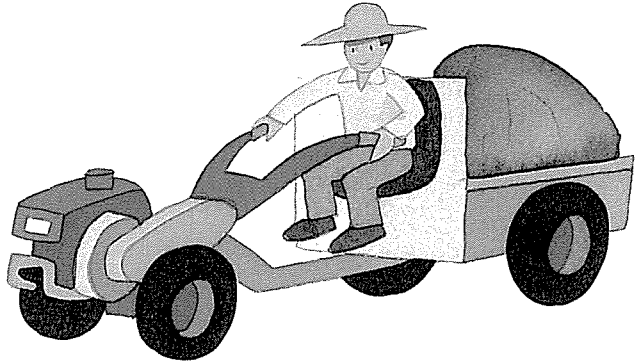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노령층을 경제주체로 참여시키기 위해 회원국 정부가 연령차별을 없애고 고령 노동자의 취업을 장려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경제성장은 물론 노인들이 퇴직 후 겪는 심리적 좌절이나 삶의 질 하락 등 사회적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 자살률, 전체 자살률보다 2.3배 높아

노인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무관심과 생활고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2001년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자살률은 10만명당 27명이었으나 노인은 10만명당 61명으로 전체 자살률의 2.3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매일 7명의 노인이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이다. 또 올해 전체 자살자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8.9%로 지난 99년의 19.4%보다 9.5% 포인트나 늘었다.

이제 노인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서의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빠르게 진행되는 핵가족화와 가족해체 현상 등에서 보듯이 이제 노인 부양은 더 이상 전통적인 효사상에 기댈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재앙에 가까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문제는 노령화 속도에 비해 노후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제도 마련 등의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45년에서 115년이 걸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해왔다. 반면에 고령사회까지 19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사회는 초고속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작용과 노인문제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력과 노인복지 인프라가 잘 구축된 일본도 노인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른 우리 사회가 10



년뒤 닥칠 여러 문제는 상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보다 최고 5배 이상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대책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농촌지역 노인복지, 의료시설 턱없이 부족

특히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노인복지 시설과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올해 노인복지 예산은 4천78억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0.37%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경로연금 등 고정경비를 제외하면 투자비는 천9백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들에게 제2의 일자리를 찾아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인문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 당국은 노인복지 예산을 가능한 한 대폭 늘리고 노인요양 시설을 크게 확충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